

# 미래 흐린 바른미래·평화 없는 평화당... '제3지대' 운명은

바른미래 '손학규 퇴진' 놓고 막장...안철수 캠백 놓고 관심

평화당 내분 사태도 바른미래와 데칼코마니...DJ도 못 막아

원내 제3,4당인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최근 내홍으로 '반쪽' 활동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들 사이에서 오가는 새로운 제3지대 구축 진행 과정에 관심이 모아진다.

◇ 한지붕 두가족 바른미래, 안철수 복귀가 변화의 축매 역할?

바른미래당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을 이끌었던 안철수·유승민 전 공동대표 계파와 손학규 현 대표 및 호남 의원들로 당내 세력이 갈려 있는 상태다.

특히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지난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뒤 '을 주석 때까지 당 지지율을 10%까지 올려놓겠다'고 언급했으나, 최근 여론조사 당 지지율이 4~5%에 그치면서 당내에서 퇴진 목소리가 거세지는 형국이다.

퇴진을 요구하는 최고위원들은 지난 24일부터 최고위원회의 보이콧을 선언, 회의에 불참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바른미래당 전·현직 위원장들이 당 정상화를 위한 비상회의를 여는 등 손 대표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결의문까지 채택했다. 그러나 손 대표는 이러한 행보를 당권싸움이라고 규정하며 내년 총선 승리와 정치개혁에 앞장서겠다는 입장은 앞세우고 있다.

외부에서는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복귀설이 두드러지면서 바른미래당은 안 전 대표의 정계 컴백이 안철수·유승민계 외 국민의당계 의원들

의 제3지대 구축을 위한 행동 실현에 축매제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 분열 깊어지는 '바른미래 데칼코마니' 평화당

이러한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것은 평화당 내 깊어지는 정동영 대표 중심의 당권파와 유성엽 원내대표 및 박지원·천정배 의원 중심의 제3지대 파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 연대'(대안정치) 즉 모두 바른미래당을 제3지대 구축의 길에 동행할 파트너로 꼽았다는 점 때문이다.

정 대표 측은 당선부터 줄곧 '정의당보다 더 정의롭다'는 당 노선을 강조했다. 첫 행보가 부산 한진중공업 조선소 현장을 방문하는 것이었고 이후로는 각종 투쟁현장 방문은 물론, 선거제 개혁에 앞장서는 등 개혁노선을 꾸준히 밟고 있다.

그러나 정 대표 체제가 1년이 다 되어가도록 당 지지율은 1~2%를 맴돌았고, 이대로 총선을 치르면 승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이들을 중심으로 대안정치라는 세력이 새로 결성된 것이다. 대안정치 측은 당내 별도 세력을 구성하기 전부터 제3지대 구축을 주장하며 현 평화당 지도체제에 변화를 주장했다. 정 대표가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양측의 갈등은 갈수록 심화되는 양상이다. 평화당은 당초 지난 24~25일 DJ 서기 10주기를 맞아 전남 신안 하

의도 생가 방문 행사를 진행했는데, 기획 당시에는 당 차원으로 했던 것임에도 본 행사에 대안정치 측 인사들은 불참했다. 급기야 다음달 1~2일에 별도로 행사를 치르기 했다. 정 대표가 대안정치 측 인사들을 향해 최근 최고위원회의 불참 등을 사유로 징계할 수 있다는 경고성 발언을 한 것이 원인이 됐다.

◇ 용어는 같은데... 평화당, 제3지대 구축 놓고 '동상이몽'

정 대표 측은 이번 서거 10주기 행사에서 발표한 하의도 선언을 통해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녹색당, 청년당, 시민사회단체와 개혁연대 내지는 연합체를 구성해 총선을 승리로 이끌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 측은 제3지대를 현 평화당을 자강(自強)하는 방향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 정동영 대표 체제의 유지를 강조하고 있다. 대안정치 결성 전 당내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등의 견의가 있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 근거로 꼽힌다.

정 대표 측은 자강에 대한 당내 여론을 보다 확장해 현 체제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통해 하의도 선언에서 밝혔던 다른 당과의 개혁연대 및 선거연대를 통해 차기 총선에서 제1당이 되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반면 대안정치 대표를 맡고 있는 유성엽 원내대표는 최초 결성 이후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이미 4~5명의 의원들이 함께 제3지대 구축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는 국민의당계 호남 의원들과 현재 무소속으로 활동 중인 국민의당 출신 손금주·이용호 의원도 포함됐다.

유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바른미래당 소속 주승용 부의장과 김동철 의원, 문병호 최고위원을 국회에서 만나 앞으로 제3지대에 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망했다.

우선 문병호 최고위원은 유 원내대표의 회동에서 제3지대 관련 논의가 있었다는 소식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했다.

문 최고위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우연히 만난 것"이고 원래 당내 갈등이 심화돼 주승용·김동철과 만나려한 것인데 유성엽 원내대표가 와 있었다"며 "그 자리에서 평화당과 우리당 이야기하다 헤어진 것이다. 제3지대 때문에 만난 것은 아니고 앞으로 그것 때문에 만날 일도 없다"고 설명했다.

문 최고위원은 평화당과 연이는 것이 제3지대 구축이 아니라 '스몰 텐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 서 "우리가 먼저 평화당과 무언가를 할 일은 없을 것이다. 김동철, 박주선, 주승용 모두 '빅 텐트'를 말한다. 즉 안철수·유승민과 같이 가자는 주의지 평화당과 하자는 사람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정동영 대표의 제3지대 관련 계획에 대해서도 "정 대표의 제3지대 생각은 우리와 다르다. 파이를 키워야 한다는데에는 동의하니까 서로 조정하고 양보하긴 해야겠지만, 자기 입장이 우선이라 잘 안 될 것"이라고 내디뎠다.

한 바른미래당 중진 의원 관계자도 "평화당과의 소통합을 염두에 둔 통합은 실패할 것으로 보기에 더 큰 통합으로 가야하는데 그런 목표로 가기 위해서는 각자 당내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당장 시기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현재로선 개별적으로 말만 무성하고 '이래선 안 된다'고 한숨만 쉬는 상황이지 추진 주체도 없고 동력도 다 떨어졌다"고 전했다.

뉴시스

## 文대통령, 여름 휴가 취소... “외교 현안 직접 관리 의지”

4강국 외교 갈등·北 도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9일부터 8월2일까지 대체간 예정했던 여름 휴가를 취소했다고 청와대가 28일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 문자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이 예정됐던

던 여름 휴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문 대통령의 휴가 취소와 관계 없이 참모진들의 휴가는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당초 문 대통령은 오는 29일부터 대체간 여름 휴가를 다녀온 예정이었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대통령 휴가 복귀 이후 휴가를 떠나는 등 청와대 주요 참모들도 조를 나눠서 휴가를 갈 계획이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휴가 취소 통보와 함께 "직원들의 예정된 하계 휴가에는 영향이 없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정상 근무를 할 예정이지만, 직원들의 계획된 휴가 사용 등의 상황을 고려해 매주 월요일 주재하던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는 열지 않기로 했다.

문 대통령이 여름 휴가를 취소한 것은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이 여름 휴가를 취소한 것은 최근 동시다발적으로 터진 일본·중국·러시아 등 4강국과의 외교 갈등과 북한의 신형 전술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산적한 외교 현안 속에 휴가를 강행하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 황교안 남북군사합의 폐기 요구에 與 “한국당 전쟁 원하나”

“제1야당 대표 수준이 이 정도라니... 참으로 한심”

“외교적 식견도, 안보 전략, 리더십 모두 낙제점”

더불어민주당은 28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를 요구한 데 대해 “명색이 제1야당의 대표가 한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수준”이라며 “황 대표와 한국당이 원하는 것은 전쟁이니”고 비판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황 대표는) 어렵게 진행돼 온 남북미 대화와 협의의 과정을 무너리고 또 다시 한반도 긴장을 극단적으로 고조시켜 전쟁위기를 유발하지는 것이냐”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황 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문 대통령과 이 정권이 주장해 온 한반도 평화가 한마디로 신기루였음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며 “9·19 남북군사합의를 즉각 폐기하고 대북 제

재 강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 대변인은 “참으로 단견이고 합심하다”며 “누구보다 초당적 협력으로 한반도 평화를 이끌어 내는데 앞장서야 할 제1야당의 대표가 한 말이 이 정도 수준이라니 국민은 불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 대표의 발언이 진실이라면 자격이 없다. 외교적 식견도, 안보 전략도, 지도자적 지혜와 리더십도 모두 낙제점”이라며 “공안검사 경력과 탄핵당한 정부에 부여한 수준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